

# 빛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가계·기업 대출 '역대 최대'

## 금융 이슈리포트

### 대출공화국

7월 광의 통화량 3092조8000억  
8월 銀 가계대출 11조7000억 늘어  
중소기업 신용위험 누적 '경고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된지 반 년 만에 대한민국은 대출공화국이 됐다. 가계와 기업 모두 사상 최대치로 대출에 나서며 그야말로 '빛잔치'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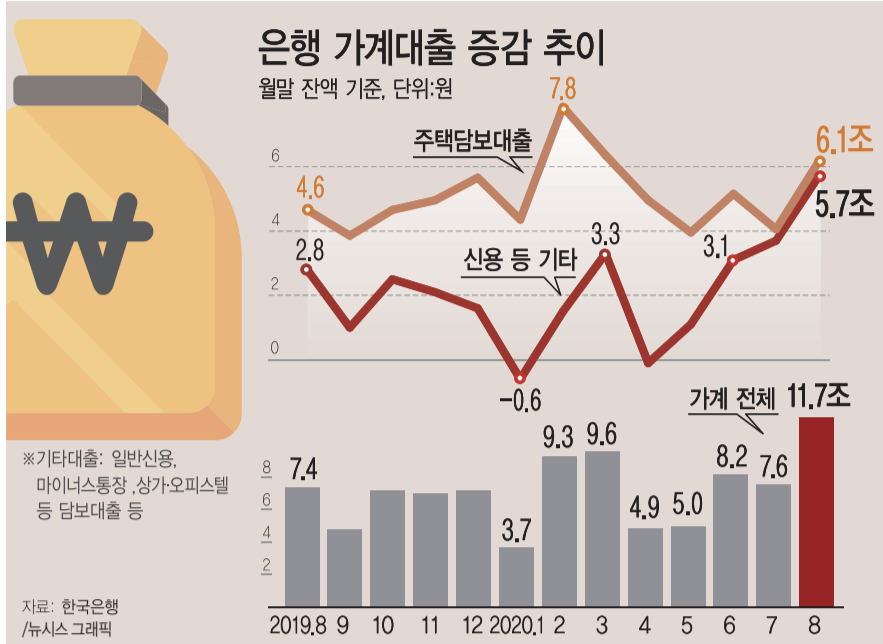
이유는 복잡적이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비해 일단 현금을 쌓아두자는 수요가 컸다. 매달 폭증하는 대출 추이를 보면서도 정부가 선불리 대출 조이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급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반면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들쭉이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대출로 이어졌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092조8000억원으로 6월보다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대출)이 이어지면서 시중통화량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달 금융권 대출 추이를 감안하면 8월 시중통화량 역시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 ◆가계대출 月 증가폭 '사상 최대'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는 질도 나쁘다. 신용대출 등 단기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1조7000억원이 늘었다. 월중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이전 최대치인 올해 3월 9조6000억원보다도 2조원이 넘게 많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규모 역시 지난달 5조7000억원으로 전월 3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증가폭은 더 확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4조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 6조5000억원의 두 배 가 넘게 급증했다.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과 계약대출(보험)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 흐름인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전금융권 신용대출이 주식매매자금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수요, 일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긴급 매매자금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급증했다"며 "주식,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업대출 급증·중소 신용리스크 누적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누적되는 것은 아닌지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원화)은 5조9000억원이 늘어 전월 8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누가 빌렸는지를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다르다.

대기업대출은 1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6조1000

억원 증가해 전월 6조4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대출수요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맞물리면서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 중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의 기업신용은 125조2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 중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이 119조5000억원,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5조7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유동성에도 기업들의 신용위험지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빠르게 확대됐다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금융위 당시와 달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美·유럽, 코로나 실업률 희비

美, 실업자 구제 초점... 실업률 급등 유럽, 고용유지... 팬데믹 전과 비슷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서로 희비가 엇갈렸다. 실업급여 등 실업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한 반면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 대책을 주로 활용한 유럽은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과 비슷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4월 중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이후 대량해고 발생을 막기 위해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적극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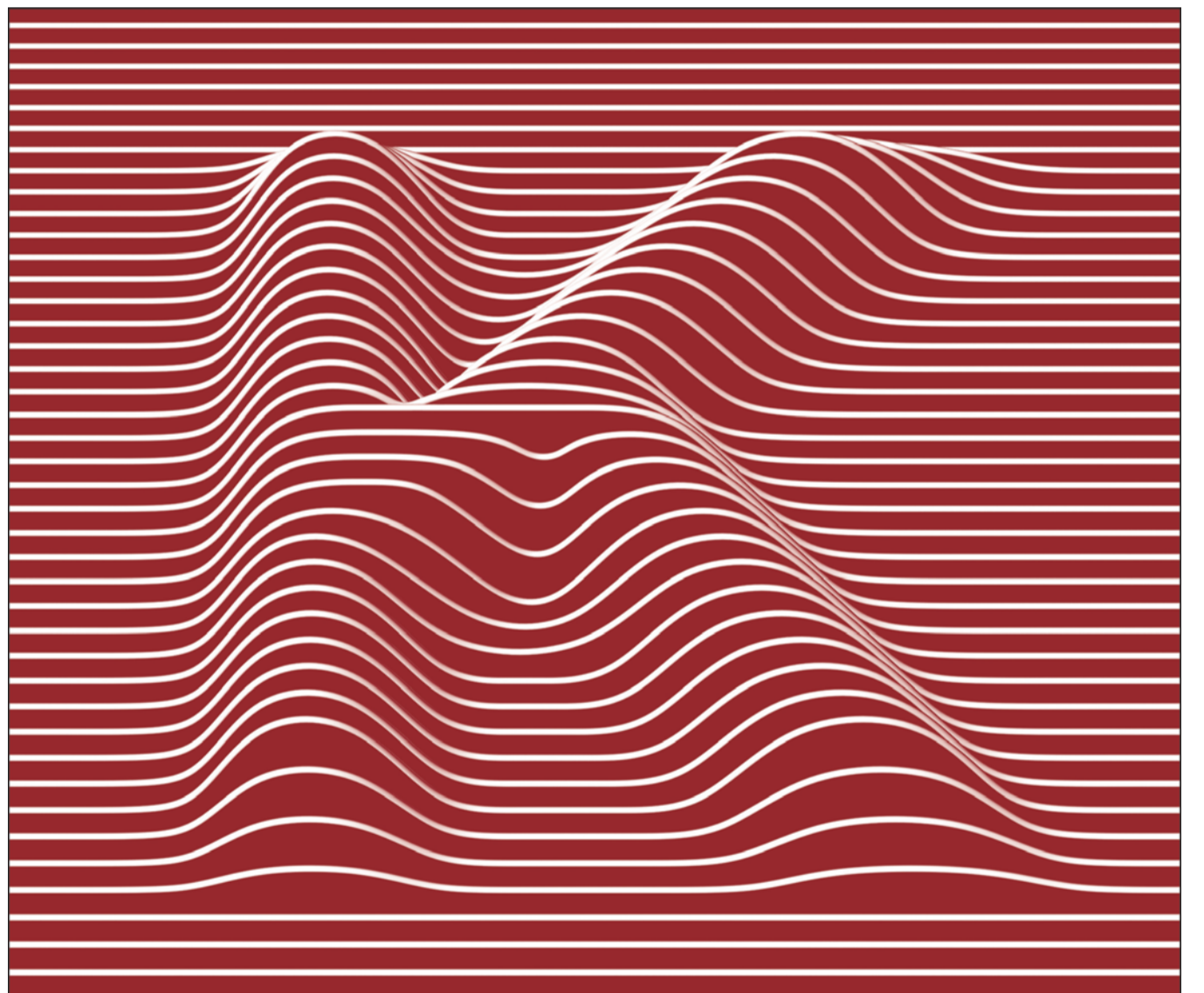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고용주 부담은 줄이고,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 내 고용유지제도가 확산됐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절감한다"면서도 "다만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해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줬다.

한은은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축근로와 실업급여 모두 경제위기 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상미 기자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고려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7개 첨단분야학과 신설은 고려대가 만드는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교육과 연구의 혁신, AI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캠퍼스, 비교과 및 창업 활동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등 고려대가 이끄는 새로운 흐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0. 9. 23. (수) 10시 ~ 9. 25. (금) 17시
- 세종캠퍼스 : 2020. 9. 23. (수) 10시 ~ 9. 28. (월) 18시
- 접수처 : oku.korea.ac.kr